

# 나의 제언

## 교수 정년 65세 이후의 연구참여에 관한 견해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권옥현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정년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 65세로 되어 있다. 65세에 정년을 하고 자동적으로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교수 정년이 70세이거나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 65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이 많으며 한창 교육연구에 능력이 있을 때 정년에 막혀 좋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아주 많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된다. 젊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안 된다면 늦게 일할 수록 국부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가 있다 여기서는 이공 분야의 연구와 연구를 통한 대학원 교육 중심으로 다룬다.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35세에 채용된 후 10년 동안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치면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업적을 이루는 데 열정적으로 일한다. 정교수가 되는 45세에서 60세까지 15년간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나 학과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60세가 되면서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못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63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박사과정 학생이 줄어들면 공동연구하기 힘들어 석사과정 학생들도 60세부터 교수연구실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만약 교수가 70세까지 일 할 수 있다면 65세까지 박사 및 석사 과정 학생을 받을 수 있다. 정교수로 대학원 학생을 받아 지도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 30%가 늘어나게 된다. 전 교수 경력으로 봐도 20%가 늘어나게 된다. 대학의 업적이 우수연구인력을 배출하는 것과 우수연구결과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세까지 대학원 교육 연구를 연장하는 제도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는 연구는 혼자서는 힘들고 대학원생과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연구하는 데는 지도 할 수 있는 대학원생이 있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대학원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에서 정년후의 연구연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모든 교수에게 자동적으로 65세에서 70세까지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일찍 은퇴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능력이 다소 감퇴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수령을 65세 이후로 연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 수령자가 되며 연금 수령 자는 정규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연금제도도 65세 이후 연구에 참여하는데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넷째, 누구도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없이 일부 교수는 65세에 정년을 하고 일부 교수는 그 이후까지 교육연구가 연장되는 경우, 65세에 정년하는 교수의 박탈감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교육 연구 봉사를 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 많은 교수에게 65세 이후의 교육연구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

여섯째 대학의 공간이 넉넉지 않아 많은 교수에게 65세 이후의 교육연구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

일곱째, 65세 이후에 정부 연구과제에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재원을 확보하여 연구경비와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비정규직이더라도 전일제 교원이면 장기대형과제가 아닌 경우에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정부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65세 이후의 대학원교육 연구 연장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KAIST와 사립대학인 POSTECH은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이다. 카이스트에는 특훈교수, 포스텍에는 대학펠로교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전에 선정하며 70세까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65세까지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교수의 극소수(3~10%)로 제한하거나 또한 40~50대에 이미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을 정년 훨씬 이전에 선정하기 때문에 넷째 문제가 해결되었다. 65세 이후는 봉급지급을 대폭 낮춰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수이기 때문에 여섯번째 문제는 중요하기 않게 된다. 이 제도가 70세까지 교육연구를 연장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그러나 숫자가 제한적이다.

현재 한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다른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5년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첫째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타 대학에 가서 새로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어 연구에는 기여할 수가 없다. 거의 일반 교육이나 학교발전에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65세 이후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다른 제도가 또 있을까?

연구교수제도를 생각해 본다. 65세까지 박사과정 학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대학원 학생 지원비를 부담해야 하며 65세 이후의 본인 봉급은 연구비에서 충당하거나 혹은 받지 않는 제도이다. 연구비가 있어 공간사용료 등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다. 60세 이전에 65세에서 70세까지의 연구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큰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경력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교수가 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교수제도는 모든 교수에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넷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짐이 되어 쉽게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문제는 본인 연구비로 해결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계획대로 연구비가 확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연구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 등으

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65세 이후의 연구참여에 필요한 여섯째의 공간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수연구실을 10% 정도만 추가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요즘 대학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유가 있는 대학이 많다.

본인이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라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언급한 내용은 이공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아마 인문사회분야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 연령이 늘어나면 위에 언급한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 같다. 만약 연금수령연령이 70세라면 대학 정년이 70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도리어 65세에 조기 정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이는 실제로 외국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본인이 올해 70세가 되어 연구 연장 문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후학(後學)을 위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